

코로나 백신 접종 위험 자연 유산과 '비슷'

mRNA백신, 모유로 안 나와...인공수정 문제 없어 임신부, 8일부터 예약 시작...접종 18일부터 진행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의 경우 자연 유산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백신 유산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는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등 임신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증가해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하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신부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접종을 받은 5000여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3개월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유산 위험이 12.8%로 나타났다.

정 청장은 "접종과 상관없이 기존에

발생한 자연 유산 통계가 11~12%"라며 "기존 자연 유산과 비율이 유사해서 (백신이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 31만건의 임신이 이뤄지는데 유산이 7만4000여건으로 하루에 200건 정도"라며 "물론 임신부와 가족의 우려가 크겠지만 현재까지 임신부 접종을 시행한 나라에서 접종으로 인한 이득과 위험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송준영 고려대대의 감염내과 교수는 "mRNA백신은 체내에서 분해가 돼 모유로 배출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돼 코로나19 면역을 전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조금준 고려대교로병원 교수는 "인공수정과 같은 시술이 백신 접종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18개 국가가 참여한 연구에서 코로나19 비확진 임신부에 비해 확진된 임신부에서 조산 위험은 59%, 저체중아 분만 위험은 58% 높았다.

또 임신부 확진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중 13%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임신부의 경우 가임기 여성에 비해 위중증화율이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청장은 "만35세 이상 고령,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WHO(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임신부에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임신부 접종 예약은 오는 8일 오후 8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실제 접종은 18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백신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접종 후 임신부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예방접종 3일, 7일, 3개월, 6개월 후 문자 알림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임신부에 대해서는 등록해 추적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에 대해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기저질환 있거나 고위험 임신부는 백신 접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보성경찰, 대형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전개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9월 30일 보성군 조성면소재 과격차량 조성검문소(2번국도)에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등 대형교통사고 유발행위 및 과적 차량 집중단속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상대 노인학대 예방 교육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최근 나주 고구려대학교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총 32명)'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완도해경, 수상 오토바이 타다 파도에 휩쓸린 30대, 구조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10월 3일 제주 추자도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출항해 해남 땅골항으로 이동 중 실종된 A씨(남, 30대)를 약 1시간만에 해상에서 발견해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완도=이민혁 기자



담양소방, 축사 화재예방 종합대책 강화

담양소방서는 최근 화재에 취약한 축사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 역학조사관 단 10명 1인당 14.5만명 '격무'

낮은 급여, 고강도 업무에 비해 불안정한 미래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이후에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핵심 인력인 역학조사관은 10명에 불과해 격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10월 3일 광주시와 질병관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에 배치된 역학조사관은 시와 5개 자치구 통틀어 10명에 그치고 있다. 전체 인구를 나누면 1인당 14만5000명의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역학조사관 중 4명은 광주시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자치구 보건소에서 활동중이다. 시 역학조사관도 당초 2명에 불과했으나 피로감 누적과 업무 과중 등을 감안해 지난 6월 2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4명으로 늘었다.

자치구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에 2명이 배치됐고, 나머지 4개 구에는 각각 1명씩 근무중이다.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불확실한

신분과 병원 의사 대비 3분의 1 수준인 낮은 급여, 고강도 업무에 비해 불안정한 미래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역학조사관 1명이 하루 맡게는 확진자 4~5명의 세부 이동동선과 밀접접촉자, 집단감염 시설 위험도평가 등을 담당해야 할 처지여서 격무에 따른 피로감이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에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며, 역학조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임명할 수 있다.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72명으로, 구별로는 광산이 1682명(3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구(1191명, 23.5%), 서구(1013명, 19.9%), 남구(530명, 10.4%), 동구(299명, 5.9%) 순이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동구의회, 의원운영 식당서 업무추진비 집행

64차례 총 697여만원 사용

광주 동구의회 등이 기초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4일 광주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동구의회 등 6개 부서가 A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총 697만 6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구의회 등은 A의원이 대표로 등록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 취임 전 해당 식당을 거의 이용하지 않다가 취임 뒤 여러 부서가 식당과 거래했고, 주로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게 감사위의 판단이다.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간주돼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최이슬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